

자료번호	11. 5. 11
제 호	511

CP-1-52

#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

민족공산주의

1969. 7

국 토 통 일 원

]

「루-마니아」가 자주로선에 접어든 것은 벌써 60년대 초기이지만 내외정치면에 있어서 그 본격적인 변화양상을 들어낸것은 67년 부터이며 작년의 「체코」사태 이후 「루-마니아」의 자주적 경향은 더욱 현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쏘련군의 「체코」침공은 발칸의 사회주의 제국을 심하게 자극했다.

그러나 쏘련군이 「프라하」를 강점했듯이 「부카레스트」를 탄압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이유는 「루-마니아」의 지배체제가, 자주적이면서도 쏘련의 맑스.레닌주의를 엄연히 국가이념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되, 독립주권국가로써 그들의 국가이익을 쫓아 내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개혁공산주의> 가 아니라 소위 <민족공산주의>를 할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를 이념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고 그리고 그들이 민족공산주의에로의 제 개혁을 어떻게 단행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루-마니아」의 체제를 이념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의연히 쏘련의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주로선은 사실상 전통적 공산주의에서의 이반(離反)은 아닌것이다. 그들이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에 있어서 푸로레타리아의 일당독재가 행해져야 함을 확신하고 있는 한 그들의 건설방법이 어느만큼 자주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들의 이념이 결코 퇴색한 것은 아닌 것이다. 쏘련군의 「체코」강점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쏘련의 공산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로 보아 「루-마니아」는 이념적으로 아직도 확고부동하다.

Arad에서 행한 68년 9월의 「체아우체스크」 연설은 「루-마니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쓰. 레닌의 제설이 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동년 11월 「포렌드」의 제5차 노동자연합회의에서 「브레즈네프」가 행한 연설을 「루-마니아」공산당은 적극 찬동하는 공식 논평을 가했었다.

이념적으로 이처럼 건실한 「루-마니아」 공산당이 왜 민족공산주의라는 독자론을 택했는가에는 흥미있는 의아를 가질 수 있지만, 한말로 해서 동일이념에로의 세대강화 보다는 한 이념을 위한 국가이익을 더 높이 평가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2년 「코메콘」이 「루-마니아」중공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데 반발한 때 부터 그들은 그 후 줄곧 민족공산주의라는 이름아래 밖으론 독자적인 외교로선을 걷고 안에서는 Nation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배려한 국책에로 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었다. 예컨대 외정면에서 보던 지난 해의 「체코」사태 발생시 「루-마니아」는 주권국가의 내정면 간섭론을 들고 나왔었다. 소련의 제한주권론을 반박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적 국제법의 준칙에 의거 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68년 10월 「루-마니아」의 외상대리 「Malita」 씨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면 소련의 국제법은 유엔의 민주주의적인 헌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구블럭 제국에게 제한주권론을 내세움으로써 소련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외적으로 이와 같이 「루-마니아」는 한동안 종주국이 제시한

제한주권론에 반박했지만 종주국 및 불력맹방과의 적들만은 피하기 위함인지 대소비난을 중지하고 또다시 동불력의 일원으로 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 반면 내정면에서 자주로선에 입각한 경제, 행정, 사회질서 및 법률등 제분야의 개혁을 독자적인 방향으로 단행해가기 시작했다.

둘째, 자주로선을 걷는다는 「루-마니아」의 국제관계를 간추려 보자. 작년 8월 「체코」사태가 발발하자 「루-마니아」는 다른 불력 국가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소련의 무력개입을 신랄하게 비난했었다. 「체코」공산당은 반사회주의 세력의 제거에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도 소련이 「체코」공산당과의 전해조정에 평화적방법을 사용치 않았음은 극히 유감된 일이라고 비난하고, 아울러 이같은 행위는 사회주의 세계질서의 통일에 큰 충격이니만큼 소련군은 「체코」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밖으로 이와 같이 강경태도를 표명한 「루-마니아」는 안으로는 자주국방의 강화를 위해 호국군 (예비군)을 창설하기도 했었다. 연이나 매우 중요시되는 점은 이와같은 「루-마니아」공산당의 내외정책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루-마니아」의 강경태도에 소련의 압력이 가해지자 「루-마니아」는 대소태도를 일변하여 그 비난을 중지하고 오히려 「루-마니아」공. 산업이 소련군의 지원하에 발전되었음을 치하하는 등으로 우호관계를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실은 정치는 「힘」이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호예이기도 하다.

그 후 「루-마니아」는 뽀력권 외교에 있어서 비단 대소관계의 정상화에만 몇지 않았다. 소련군의 「체코」강점시 모두들 소련의 동조자라고 비난했었던 「동독」, 「포랜드」, 「불가리아」와도 곧 이해의 길을 열었다. (68년 10월 하순 「루-마니아」가 동독에 포단을 초치하고 경협회의를 가졌는 것을 참고할 것)

그러나 다른 한편 「루-마니아」의 외교는 뽀력권내에만 몇지도 않았다. 동서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면서 세계공산주의를 진척시킨다는 명분아래 「루-마니아」는 꾸준히 서방접근에도 적극성을 띄었다. 68년 9월에 영국과 백이기의 외상을 초치했었고 동년 10월에는 영국과 68~73년에 공한 장기한부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동년 11월에는 라틴아메리카의 9개국 외상을 초치하여 문화교류협정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다. 「루-마니아」의 외교는 그뿐만은 아니다. 그들은 수정주의자인 「유고」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했었고 (68년 10월에 유고공산당 지도층을 초치하고서 69년의 물자지원 문서를 작성한 것을 참조할것) 나아가선 미국 및 중공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보였었다. (68년 11월 중공 국방상의 「루-마니아」 방문과 동년말 미국부장관 「러스크」씨의 「나토」이사회 연설을 참조할것)

「루-마니아」의 자주외교란 결국 코메콘과 왈소조약기구를 이탈하지 않은채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로 주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국가이익을 쫓아 동서외교를 신축성있게 전개하려는 것이다.

세째, 사회질서의 개혁면을 보면 「루-마니아」공산당은 사회주의 세력의 화세를 위해서 전국민의 도의적, 정치적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루-마니아」는 68년 11월에 <사회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각종의 사회단체를 규합시켜 놓았고 <소수 민족보호법>을 보완하여 국내 이민족의 반발을 무마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루-마니아」의 이민족이란 전 인구의 8.4%를 점하는 헝가리인과 2%를 점하는 독일인 및 잔여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인등을 말한다. 이들 중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써 내정에 영향력을 갖는 민족은 헝가리인 뿐이다.

네째, 제 개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과 지방행정개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도는 다른 동력국가에 비해 비교적 효율적이었던바 51~66년간의 집계를 보면 공업생산액이 년평균 13.2%, 국가소득이 9.9%, 무역은 10.9%, 투자는 14.4%라는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감독하는 중앙관리법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당의 관리관과 전국의 기업담당 실무자에 불신이 생겨서 생산도가 비능률적임을 확인하게 되자 정부는 기업담당 실무자에게 어느 한도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생산관리를 개혁한 것이다. 즉 67년 말을 기해서 공산당이 주관하던 중앙관리적 방법을 지양하고 경제의 계획과 그 시행을 구분해서 각기의 실무자에게 경영실권을 양여하는 방향으로 개혁했었고 또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행정국의 지역단위도 개편했었다. 경제개혁에 따른 행정의 지역적 개편을 보면 첫째 그들은 기업의 통합을 위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했고 둘째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성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도 개편했었다. 즉 단지조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통합 축소한 것인데 68년 2월 이후 전국을 39개의 Gemeinde로 개편하고 (1 Gemeinde에는 평균 45만의 인구와 6,100평방키로의 지적을 기준했음) 각 Gemeinde 행정에는 자치적 방법을 상당히 허용하였다.

다섯째 법제개편을 보면 1967년에 부정축재관리법을 제정했었다. (부정취득이라고 인정되는 소유재산은 80%를 정부에 헌납토록 조치한 재정관리법의 일종)

이와 같은 탈취적인 재정법의 제정공포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제법 인도적인 법제개정도 있었다. 즉 68년 4월에 「체아우체스크」는 50년대 초기에 부정법으로 처벌받은 당원들의 구제를 선언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공산당의 자유재량에 의해 허다히 행해진 가혹한 형벌조례들을 대법원을 통해서 폐기시키기도 했다. 68년에 제정한 신형법전에는 종신형이 폐지되어 있는바 이는 진보적이고도 인도적인 법제개정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루-마니아」의 제개혁을 종합해 보면 67년 이래의 개혁경향이 68년의 「체코」사태 이후에 더욱 현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주권보장의 확실도가 공업건설에 있다고 확신한 「루-마니아」 공산당은 경제개혁과 행정개혁을 통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고 <사회주의 통일전선>의 형성과 공산민족 보호법의 보완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단합을 촉구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강화로써 자주국방을 다짐하고 있는 기세이다. 형제국이라고 일컫는 맹방체코가 공주국으로 부터 그 주권을 침해당한 것에 자극되어 그들은

그들의 실정에 알맞는 계개혁을 위와 같이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자가 어느 면에서는 세계혁명을 목표로한 공산주의라는 이념 그 자체를 민족의식과 국가이익의 고수만을 위해 변질시켜가고 있지 않나 추측할수도 있지만 이는 결코 하나의 비이념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계개혁에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국채을 요리하는 공산당의 지위가 굳어져 있고 또 더 굳어져 가고 있는한 계개혁은 모두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실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68년 10월의 집계를 보면 공산당원 수가 65년의 145만에서 68년엔 180만으로 증가되어 있다. 이 사실은 「루-마니아」 공산당이 자유로운 방법이든 혹은 억제적인 방법이었던 간에 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기록인 것이다.

동구블럭국가의 공산당중에서도 국민의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루-마니아」정부가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국가정치에서 위와 같이 노련한 <그네정책> (Schavkelpolitik)을 구사하고 있는 판국에 우방의 닉슨대통령이 그 나라를 친선방문하는데에는 동서간 장상태에 무엇을 가져 올 것인지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끝으로 금번의 닉슨방 「루」가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 예상해보자. 월남전쟁과 중동분규가 상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에 중소분쟁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목하의 정세로 보아 금번의 닉슨방 「루」가 동서 화해로써 평화공존을 일조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기는 아닐거라는 전제하에 그의 동방여행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는



없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여행이냐를 가상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한다. 첫째 미국의 동방접근은 결국 소련을 자극하는 일 이기에 동서관계가 더 악화될 우려도 있으나 이 악화를 피하기 위한 어느 형태론가의 타협에서 정상회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둘째, 금후 미국은 동요하는 동구권의 제문제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태도표명의 첫 행동일 수 있으며 세계는 미국의 중공문제 해결에 「루-마니아」를 교량역으로 이용하려는 저의를 가진 여행일 수 있고 네째는 70년대의 대공외교를 위해 공산권의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하되 「루-마니아」의 서방접근을 환영하는 뜻에서 약간의 선물을 전하는 단순한 여행일 수 있다. 「루-마니아」는 낙슨방문을 치르고서 8월초에 모스크바를 향하게 되어있는바 동서 긴장속에 끼어 있는 「루-마니아」의 자주외교가 어느 시점까지 그 노련한 <그네정책>을 구사하게 될는지 매우 의문이다. 달리 말하면 동구권의 종주국인 소련방이 「루-마니아」의 자주외교를 어느 시한까지 허용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이용하고 또는 어떻게 억압하게 될지는 예측키 어려운 크레믈린의 Realpolitik 그 자체이다.